

memo

2017년 6월 17일 시행 교육행정직 9급 행정법총론

[총평] 행정법총론 김욱 교수

○ 단위별 출제 분포도

제1편 : 4문제

제2편 : 10문제

제3편 : 2문제

제4편 : 4문제

○ 총평

대단히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틀린 것 보다는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많기는 하였으나 가장 기본적인 학습사항을 묻는 문제들이었다.

지금까지의 시험에서는 이론적 측면을 경시한 측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 교행직 시험에서는 이론적 측면을 테스트 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판례문제는 대부분 그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에서의 기본적 판례의 내용을 묻는 문제였다.

수험생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문제는 1문제(19번 문제) 정도로 보인다.

따라서 합격권에 이르는 점수는 95점으로 평가된다.

○ 향후 대책

고득점을 좌우하는 것은 특히 이론문제이다.

memo

만약 판례가 그 동안 접하지 않은 내용을 묻는 것이라면 이것은 모든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충실히 기본이론을 학습한 다음, 이와 관련된 판례를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시험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된다.

법령에 대해서는 강의 중에 다루는 내용 위주로 학습하면 충분하다.

[문제 및 해설]

1.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법률우위의 원칙은 침해적 행정에만 적용된다.
- ②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하다.
- ③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 ④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금액 결정은 법률유보(의회유보) 사항이다.

[정답] ①

[해설] 법률유보의 원칙과 달리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2.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실정법상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 ②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 ③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는 조례는 무효이다.
- ④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다.

[정답] ④

memo

[해설] 조약은 국가와 국가(또는 국제기구) 사이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다.

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 ②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 ③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 ④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정답] ①

[해설] ①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즉, 공법관계이고 ②③④는 모두 사법관계이다.

4.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없다.
- ② 재량권의 영으로의 수축이론은 개인적 공권을 확대하는 이론이다.
- ③ 개인적 공권은 사권처럼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는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도 개인적 공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③ 틀림. 개인적 공권은 포기가 제한된다. ④ 틀림.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특히 자유권적 기본권 규정)으로부터 개인적 공권이 바로 도출될 수도 있다.

memo

5.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보기>

- ㄱ. 재개발조합설립인가
- 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 ㄷ. 사립학교법인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행위
- ㄹ. 서울특별시장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정답] ①

[해설] ㄱ - 특허. ㄴ - 특허. ㄷ - 인가. ㄹ - 공증

6. 강학상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다.
- ② 허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갱신 후에도 갱신 전 법 위반사실을 근거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국가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까지 해제된다.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다. ② 틀림. 허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과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한다. ④ 틀림. 국가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만 해제된다. 즉, 「국가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금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memo

7.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처분이다.
- ③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불필요하다.
- ④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정답] ①

[해설] ② 틀림.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확약에 해당한다. 판례는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③ 틀림.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필요하다. ④ 틀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에 해당한다.

8.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 ②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는 징계를 받은 자의 용인으로 치유된다.
- ③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④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없다. ② 틀림. 무효사유인 하자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징계처분의 하자가 징계를 받은 자의 용인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③ 틀림. 판례는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출장소장이 한 관세부과처분에 대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였다.

9.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절차법」은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 ②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안의 공고 및 공람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

memo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행정절차법」에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② 틀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틀림. 행정계획을 결정할 때 행정주체는 계획재량 즉,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10. 다음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은/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정주체를 한쪽 당사자로 하는 양 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 ① 행정처분
- ② 공법상 계약
- ③ 사법상 계약
- ④ 공법상 합동행위

[정답] ②

[해설] 설문은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11.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④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행정지도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② 틀림.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틀림. 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memo

1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입법부작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 ③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이다.
- ④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

[정답] ①

[해설] ② 틀림. 위법한 법규명령은 무효이다. ③ 틀림.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한 2006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이다. ④ 틀림.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13.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와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 ④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②

[해설] ① 틀림.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틀림.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판례). ④ 틀림.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에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한 경우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판례).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②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한다.

memo

- ③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은 설립 목적을 불문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④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① 틀림.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 ② 틀림.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판례). ④ 틀림.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판례).

15.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의 병과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다.
 ③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을 갖는다.
 ④ 장기미등기자가 등기신청의무의 이행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이행강제금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이다. 따라서 비록 이행기간이 지난 후라 하더라도 의무이행을 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당사자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해설] 과태료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memo

17.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포함된다.
- ②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은 제외된다.
- ④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정답] ②

[해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실무상 민사소송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18.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②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이행명령재결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재심판청구의 금지).

19.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는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②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 ③ 취소소송에는 대세효(제3자효)가 있으나 당사자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선고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③

memo

[해설] ① 틀림.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② 틀림. 항고소송 사이에서만 소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에서도 소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소송 계속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④ 틀림.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판결 선고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 행정소송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 ②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소송행위의 보완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정답] ④

[해설] ① 틀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단,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거쳐 제소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다. ② 틀림. 제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소송행위의 보완이 허용된다. ③ 틀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끝 -